

폴란드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2. 1.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4

I. 일반개황

면적	312천km ²	GDP	5,082억 달러 (2011년)
인구	38.2백만 명 (2011년)	1인당 GDP	13,510달러 (2011년)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Zloty(PLN)
대외정책	유로존 가입 추진	환율(달러당)	3.00 (2011년 평균)

-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국가 가운데 최대의 경제권 및 인구 규모를 보유한 국가로서 헝가리, 체코 등과 함께 1996년 OECD, 1999년 NATO 가입에 이어 2004년 5월에는 EU에 가입함.
- 정치적으로는 내각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9월 총선에서 법과정의당(PiS)이 승리하였으나, 2006년 11월 지방선거 이후 당시 제1야당인 시민강령당(PO)의 승리로 연정 결속력이 약화됨. 2007년 9월 연정붕괴와 조기총선 합의에 따라 실시된 조기총선(2007.10)에서 시민강령당이 승리(정권 교체)함으로써 농민당과 연정을 구성함. 2009년 6월 유럽의회 의원선거에서 시민강령당이 25석(전체의 44.4%)을 확보하여 집권여당이 압승하였고 2010년 7월 대선에서 시민강령당 소속의 코모로프스키 하원의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됨.
- 2004년 EU 가입 이후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친 EU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 EU 관계가 호전되고 있음. 2008년 하반기 이후 동유럽 경제권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으나 IMF의 예방적 차원의 금융지원 승인 등으로 국제신인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됨.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e
경제성장률	6.8	5.1	1.6	3.8	3.8
재정수지 / GDP	-1.4	-1.9	-1.8	-3.2	-2.6
소비자물가상승률	2.5	4.2	3.5	2.6	4.1

자료: IMF, EIU.

□ 2010년 이후 경제성장세 지속

- 폴란드 경제는 2005년 이전에는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경제체제가 전환되는 과정의 부작용으로 경제성장률이 5%대에 못미치는 부진(1992~2001년 평균 4.6% 성장)을 면치 못하였으나,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서유럽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폴란드에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유로존의 경기호조로 수출이 증대하고 실질임금 상승에 따라 민간소비가 증가하면서 2006년 이후에는 연평균 6%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08년 하반기 이후 폴란드 경제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으나 주변 동유럽 국가 중에서는 타격을 비교적 덜 받았으며, 2009년에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성장률(1.6%)을 기록함. 이는 낮은 대외 무역의존도, 민간부문의 채무상환부담 경감, 소득세 감면, EU 기금 수혜를 통한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등에 기인함.
- 2010년에는 전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여건 개선에 따른 내수 증가, 해외수요의 회복으로 인한 제조업체의 생산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3.8%로 회복됨. 2011년에도 노동시장의 지속적 개선에 따른 내수 및 고용 증가, 외국인투자 유입 증대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전년 수준인 3.8%로 추정됨.

□ 재정수지 적자 2011년 소폭 축소

- 폴란드 정부는 2009년 재정수지 적자 목표치를 182억 즈위티(55억 달러 상

당)로 설정하여 전년(246억 즈위티)에 비해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감축되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1.8%로 다소 개선됨.

- 2010년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재정지출 억제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감면, 지방정부의 지출 증가 및 투자 확대, 공적채무 이자지급증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GDP대비 3.2%)가 전년에 비해 악화되었으나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여타 EU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임.
- 지방정부 지출 등 재정지출 억제, 민영화 및 공기업 배당금 수입, 부가가치세율 인상(22%→23%), 경기회복에 따른 소득세 증가 등 재정수입 증가 등으로 2011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2.6%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소비자물가의 상승압박 증대

- 폴란드는 체제전환과정에 있었던 1992~2001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2%(IMF추정)를 기록할 정도로 과도한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물가관리에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나, 이후 물가상승률은 크게 진정됨.
- 2008~09년 동유럽 경제위기가 심화된 시기에 폴란드도 통화가치의 급락으로 수입 식료품과 연료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가 불안하였으나,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하반기 이후의 통화가치 회복, 경기침체로 인한 임금 하락 등의 영향으로 3.5%를 기록함.
- 2010년에는 통화가치의 일시적 급락으로 수출이 호전되고 경제위기가 진정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6%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에는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급등, 간접세(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인상, 내수 증가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1%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유럽 경제권에 편중된 무역 및 금융 구조적 문제점이 다소 우려

- 1990년대 체제전환 이후 농업 및 제조업의 GDP 대비 생산비중이 크게 위축된 반면, 서비스업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전형적인 선진 시장경제 산업구

조의 패턴을 형성하고 있음 (동유럽 최대 경제권).

- 농업부문은 체제전환 이후 정부의 농산물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타격을 받았고, 석탄, 철강 등의 중공업에 집중화된 폴란드 산업은 체제전환 과정에서 급진적인 사회변혁 없이 중공업 분야의 점진적인 구조조정으로 농업부문과 같은 타격을 받지 않았음.
- 폴란드의 교역 패턴상 수입상대국은 상대적으로 다변화되어 있지만 수출은 EU 회원국에 집중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고 유럽 금융시스템과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EU 회원국의 경제상황 변화, 특히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폴란드 경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음(전염효과).
- 2009년 기준으로 수출상대국의 79%가 유럽 국가들이고,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로존 국가 금융기관의 폴란드에 대한 익스포저가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IMF, Country Report, January 2011).

<주요 경제구조 지표>

- 산업별 GDP 대비 생산비중('10): 서비스업 63.5%, 제조업 33.0%, 농업 3.4%
- 주요 수출대상국('10): 독일(26.9%), 프랑스(7.1%), 영국(6.4%), 이탈리아(6.3%)
- 주요 수입대상국('10): 독일(29.1%), 러시아(8.8%), 네덜란드(6.0%), 이탈리아(5.8%)

나. 성장 잠재력

□ EU 가입 이후 투자여건 개선이 경제성장 견인

- 2005년 이후 제조업, 광업 및 공공부문의 생산증가율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수출호조 및 자본투자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특히, EU 가입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되고 경제성장이 활력을 되찾으면서 기계, 설비 등 자본재 산업의 생산증가율이 현저한 상승추세를 보임.
- 2011년 10월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공사(IFC)가 발표한 기업경영여건(Doing Business) 순위에서 폴란드는 전체 평가대상국(183개국) 중 62위(전년 59위)로 60위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글로벌경쟁력지수 순위에서도 폴란드는 전년의 39위/139개국에서 41위/142개국으로 40위 내외를 유지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투자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주요 성장 잠재력 지표>

- 장기(2000~08) 연평균 경제성장률: 4.4%(OECD,'10)
- 국내 저축률: 20.4%(OECD,'10)

□ 2009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FDI 유입 부진

- 1990년대 후반부터 OECD(1996), NATO(1999) 가입과 더불어 공기업 민영화 등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1~03년 민주좌파연맹(SLD) 정권의 민영화 추진 지연 및 국제경제 환경 악화로 FDI 유입은 부진하였음.
- 폴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으로 2004년 EU 가입 이후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 지속되었음. 2006~08년 폴란드에 대한 FDI 유입실적은 각각 199억 달러(전년 대비 93% 증가), 237억 달러(19%), 150억 달러(-37%)로 나타남.
- 2009~10년 FDI 유입실적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인감소 및 투자계획 축소 등으로 전년대비 13%, 30% 감소한 130억 달러, 9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이는 주요 교역상대국인 서유럽 경제권의 경기침체로 폴란드를 포함한 동유럽에 대한 투자유인이 크게 줄어들었다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산업설비에 대한 투자 축소, 기업경영실적 악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폴란드에 대한 FDI 유입의 90% 이상이 EU 회원국이므로 폴란드 FDI 유입실적은 EU 회원국의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최근의 FDI 유입 부진은 EU 회원국의 경기회복 지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주요 투자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서유럽 국가

다. 정책성과

□ IMF의 신축적공여제도(FCL)를 통한 외환시장의 안정 도모

- 폴란드는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비교적 잘 극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폴란드 정부의 확대통화정책 시행, 수출 경쟁력 상승, 비교적 건전한 금융부문, 경기부양조치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2009년 4월 15일에는 폴란드 정부가 17.5억 유로에 달하는 유로채권(2014년 만기, 독일 국채 2.306% 기준, 가산금리 363bp 적용) 발행 성공은 폴란드 경제에 대한 국제신인도가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
- 특히, IMF는 2009년 5월 신축적신용공여제도(Flexible Credit Line: FCL)를 통해 폴란드에 대해 1년간(2009.5~2010.5) 137억 SDR(205억 달러 상당)의 자금지원을 최초 승인한 이후 2010년 7월 FCL을 6개월간(2010.7~2011.1) 동일 규모의 금융지원을 연장 지원하였고, 2011년 1월에는 2년간(2011.1~2013.1) 192억 SDR(300억 달러 상당)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승인함으로써 폴란드의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함.
 - IMF의 FCL은 경제 펀더멘털이 비교적 양호한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2009년 3월 24일 도입한 제도로서 2011년 6월 말 기준으로 멕시코와 더불어 폴란드가 금융지원을 받고 있음.
- 2011년 초 IMF 실사단의 폴란드 거시경제현황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폴란드가 유럽 금융시스템과의 연계성 등 외부의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채무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함.

□ 2011년 기준금리 인상

- 2006년 1월 통화 당국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2005년 3월 이후 5차례에 걸쳐 200bp 인하)하여 4%로 낮추었으나 2007년 4월,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과 경기과열 우려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책금리를 25bp 인상(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1년간 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2008년 5월 기준금리는 5.75%를 형성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폴란드 통화당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총 250bp 인하)하여 기준금리는 2010년 말까지 3.5% 수준을 유지하였음. 그러나 2011년 들어 내수 증가, 국제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동년 1월 기준금리를 3.75%로 인상(2009년 8월 이후 17개월만의 인상)한 데 이어 4월, 5월, 6월 각각 25bp씩 추가 인상하여 2012년 1월 현재 기준금리는 4.5%임.

□ 통화가치는 2010년 하반기 이후 비교적 안정적 수준 유지

- 즈워티화는 2007년 이후 강세를 보이면서 2007년 중 미달러 대비 즈워티화

환율은 연평균 2.77을 기록하였고 2008년에는 2.41로 더욱 강세를 나타냈으나, 2008~09년 중 동유럽 경제위기로 인하여 즈워티화는 다시 약세(2009년 중 미달러 대비 즈워티화 환율: 연평균 3.12)를 나타낸 바 있음.

- 2010년 들어 동유럽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즈워티화 가치가 약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즈워티화 가치가 다시 강세(미달러 대비 즈워티화 환율: 연평균 3.02)를 나타내면서 교역조건이 악화됨. 2011년에는 하반기 이후 즈워티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달러 대비 즈워티화 연평균 환율은 2.96을 기록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3. 대외거래

□ EU 가입 이후 교역 급증

- 1991년 12월, EU와 폴란드간 EU 안정제휴협정(SAA) 체결 이후 폴란드의 EU 회원국과의 교역은 확대되기 시작함. 제조상품의 대외무역은 2004년 EU 가입 이전에 이미 무역통제가 철폐된 상태였으며, EU 회원국은 대 폴란드 무역패턴에서도 갑작스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
- 2010년 기준으로 폴란드의 총수출 규모는 2,059억 달러로 GDP의 43% 수준이었으며, 총수출증가율은 연간 20%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2009년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21%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전년 대비 14% 수준으로 회복함.

□ 경상수지 적자는 점진적 악화 추세

- 폴란드의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구조인데, 2000년대 들어 경상수지 적자는 1990년대에 비해 급속히 개선되는 추세에 있음. 2007~08년에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의 확대(소비 및 투자 수요 증대, 해외수요 위축, 통화 강세 및 임금 상승)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악화됨.
-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수출규모가 위축되었으나 경제활동 둔화로 인한 상품수입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17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350억 달러)에 비해 대폭 감소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008년의 -6.6%에서 -4.0%로 개선됨.
- 2010년에는 독일 등 주요 무역상대국의 해외수요가 늘어나 수출이 전년에 비

해 10% 이상 증가하였지만 민간소비 증가,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 등으로 수입이 늘어나 상품수지 적자가 전년에 비해 급증한 114억 달러를 기록함. 이로써 서비스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소폭 흑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및 소득수지의 적자폭 확대로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4.5%(210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악화됨. 다만, 글로벌 유동성 경색현상이 완화되면서 포트폴리오 투자 등 외국인투자가 유입되면서 자본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점은 경상수지 적자 관리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음.

- 2011년에는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5.2%(268억 달러) 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
- 외환보유액은 2008년 말 622억 달러로 월평균 수입의 2.8개월분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09년 4월 이후 폴란드의 외환금융시장 상황이 점진적으로 호전되면서 2009년 말 기준으로 외환보유액은 796억 달러로 월평균 수입의 4.8개월분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며, 2010년 말에는 935억 달러로 월평균 수입의 4.9개월분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냄. 2011년 말에는 외환보유액이 999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월평균 수입 대비로는 4.4개월분 수준으로 소폭 축소됨.

□ 외채구조 악화

- 폴란드의 연도별 외채(자본유입) 규모의 변동성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데, 2008년 이전에는 외채구조가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외채구조는 악화되고 있음.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소폭 하락하고 있으나, GDP 대비 총외채잔액의 비중은 상승추세에 있어 외채상환부담이 가중됨.

- 총외채잔액/GDP: 41.0%('08) → 56.5%('09) → 59.0%('10) → 63.7%('11)

- 총외채잔액/총수출: 96.9%('08) → 137.8%('09) → 137.5%('10) → 133.6%('11)

- 유럽 재정위기에서 나타난 경제위기국의 공통적인 문제는 재정수지 적자 악화뿐만 아니라 정부채무의 과중한 부담으로 경제운용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인데, 폴란드의 경우 정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이 55% 수준으로 아직은 외채관리상의 문제점이 심각하지 않은 상태임.

- 정부채무/GDP: 50.9%('09) → 55.0%('10) → 56.2%('11)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e
경 상 수 지	-26,501	-34,957	-17,155	-20,982	-26,786
경 상 수 지 / GDP	-6.3	-6.6	-4.0	-4.5	-5.3
상 품 수 지	-19,066	-30,659	-7,617	-11,414	-16,906
수 출	145,337	178,427	142,085	162,267	194,303
수 입	164,403	209,086	149,702	173,681	211,209
외 환 보 유 액	65,734	62,168	79,576	93,488	99,862
총 외 채 잔 액	195,376	218,022	244,880	278,269	323,683
총외채잔액/GDP	46.5	41.0	56.5	59.0	63.7
D S R	27.8	15.7	9.2	14.7	11.7

자료: IFS, EIU.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10년 7월 코모로프스키 하원의장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총리와의 갈등 해소

○ 2010년 4월 10일 카틴 숲 학살사건의 70주년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로 향하던 폴란드 대통령 특별기가 러시아 스몰렌스크 공항 근처에 추락하여 레흐 카진스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폴란드 정부 대표단 89명 및 승무원 8명 전원이 사망함.

- 카틴 숲 학살사건: 1940년 폴란드인 2만여 명이 당시 소련의 비밀경찰에 의해 처형당한 사건

○ 대통령(직선제로 선출, 5년 임기, 2회 연임 가능) 공석으로 2010년 6월 20일 조기 실시된 대선에서 7월 4일 결선투표를 통해 코모로프스키(Bronislaw Komorowski) 하원의장이 55%의 지지를 얻어 32% 지지에 그친 야로슬라브 카진스키 법과정의당(PiS) 총재를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됨(2010년 8월 6일 취임). 이에 따라 대통령과 총리(Donald Tusk)가 모두 시민강령당(PO) 소속으로 대통령과 총리간 갈등이 해소되어 정치 안정성이 제고됨.

- 차기 대선: 2015년 6월 예정

□ 2011년 10월 총선에서 시민강령당(PO) 승리

- 2007년 10월 조기총선에 의해 집권한 시민강령당은 2009년 6월 8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제1야당인 법과정의당 15석(27.4%)보다 많은 25석(44.4%)을 차지하였으며, 지난 4년간 경제정책의 성과가 양호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 점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2011년 10월 9일 실시된 폴란드 하원(Sejm) 총선에서 중도우파 성향의 집권 여당인 시민강령당은 39%(207석)를 확보함으로써 득표율 30%로 157석에 그친 보수 성향의 법과정의당에 승리함. 투스크 총리는 농촌 기반의 인민당(8.4%, 28석) 등과 함께 연정을 구성할 것으로 보여 총의석 460석중 과반수를 넘는 235석을 확보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사회 치안상태, 매우 양호

- 경제성장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 재정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개혁 정책 추진으로 복지혜택의 축소가 불가피한 점 등이 국민들의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정도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님.
- 2004년 4월 EU 가입 이후 110만명(인구의 3%)의 폴란드인이 해외에 이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최근 이민 증가와 더불어 고용 증대(2006~07년 평균 4%)로 실업률이 2005년의 17.7%에서 2008년에는 9.8%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2009년 이후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폴란드 고용 사정도 다소 악화되어 실업률이 점진적인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실업률: 9.8%('08) → 11.0%('09) → 12.1%('10) → 12.4%('11)

- 폴란드를 비롯하여 2004년 4월 EU에 신규 가입한 9개국(사이프러스 제외)이 2007년 12월 쉥겐조약에 가입함으로써 동 조약 가입국간 국경이 개방됨에 따라 EU 회원국간 민간교류 및 사회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고 있음.

□ 소요/사태 발발가능성 낮아

- 폴란드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하여 테러 위협이 있었지만,

실제 폴란드 내에서의 테러 위험은 미미하며, 주변국가와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 위험은 적음.

- 자국내 시위 및 시민 불복종운동은 합법적인 시민활동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는 1980년 8월에 창설된 중도좌익 성향의 자유연대노조(Solidarity trade union)와 같은 역사적 경험에서 유래됨.

3. 국제관계

□ EU 및 미국과의 외교관계 강화

- 투스크 총리는 대 EU 회원국과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등 실리 위주의 외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유럽 헌법조약(리스본조약)은 2005년 부결된 문제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으로서 2007년 7월부터 정부간회의(IGC)를 통해 조약의 최종안이 연말까지 마련된 후 2008년 중 회원국 비준을 거쳐 2009년 12월 1일 발효되었으며, 폴란드 정부는 2007년 4월에 의회 승인, 대통령 서명으로 리스본조약을 비준한 바 있음.
-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2011년 5월 폴란드를 방문하여 미국의 지속적인 폴란드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러시아의 유럽지역 서진을 차단하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폴란드에 대해 미국은 긴밀한 군사외교적 관계를 강화함.

□ 주변국과의 관계개선 노력

- 미국 일변도의 안보정책에 비판적인 투스크 총리는 과거사 문제로 악화되었던 독일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 주변국들과 우호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함.
 - 독일과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관계개선과 대 EU 경제협력을 통해 폴란드는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2010년 4월 대통령기 사고 이후 오히려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조로 양국간 소원한 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2011년 들어 2010년 대통령기 사고원인 규명을 둘러싸고 갈등이 초래되어 양국간 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임.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리스케줄링 실적: 외채상환태도 양호

- 폴란드 정부는 1991년, 1994년에 각각 파리클럽과 런던클럽을 통하여 채권단과 채무 리스케줄링에 합의함. 동 합의에 따라 당시 외채의 50%(순 현재가치 기준) 정도가 탕감되고, 나머지는 파리클럽과 런던클럽에 각각 2014년, 2024년까지 채무상환이 연장되었음.
- 2005년에는 장기 유로채권 발행으로 파리클럽 대상 채무의 절반 정도를 조기상환(buy-back)하기 위하여 일부 채권국과 채무재조정 협상을 추진함으로써 2006~09년 기일 도래하는 정부채무의 만기연장 등 외채 원리금상환 부담이 크게 완화됨.
- 2009~11년 중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각각 9.2%, 14.7%, 11.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잔액 비중은 동 기간 중 각각 88.0%, 81.4%, 77.5%로 단기 외채상환 부담은 다소 경감된 것으로 분석됨.

□ 폴란드의 대 ECA 연체실적 미미

- 2010년 9월 말 기준으로 폴란드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공적수출신용 승인 및 부보 지원분(17억 3,840만 달러)중에서 연체분은 2,110만 달러(전체의 1.2%)로 집계되어 OECD 국가위험 평가에 반영되는 ECA 거래경험 평가분야는 0등급의 최고 수준으로 매우 양호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ECA 인수태도

- 미국 수은: 전액 인수 가능, 재량한도 없음
- 영국 ECGD: 전액 인수 가능
- 독일 Hermes: 전액 단기인수 가능

□ 국가신용등급은 상위 투자적격등급 유지

- OECD: 2등급('09.1) → 2등급('10.1) → 2등급('11.1) → 0등급('11.10)
- S&P: A-/Stable('07.3) → A-/Positive('08.2) → A-/Stable('08.10) → A-/Stable('11.6)
- Moody's: A2/Stable('02.11) → A2/Stable('10.8) → A2/Stable('11.6)
- Fitch: BBB+/Positive('05.3) → A-/Stable('07.1) → A-/Stable('11.6)
- 2008년 10월 S&P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침체 전망에 따라 폴란드의 정부채권 등급전망을 A-/Positive에서 A-/Stable로 다시 하향 조정하였으나 2009년 이후 폴란드의 국가신용등급 및 등급전망을 추가 조정하지 않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89년 11월 1일(북한과는 1948년 10월 16일)
- **주요협정:** 투자보장협정(1989년), 항공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이상 '91년), 문화협정, 사증면제각서(이상 1993년), 사회보장협정(2009년)
- **교역현황('10):** **교역총액 46.6억 달러(대 폴란드 수출총액: 43.8억 달러)**
 - 우리나라의 대 폴란드 수출은 1996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7년에는 12.3억 달러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아시아 국가 중 대 폴란드 최대 수출국이 되었으나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2000년부터 수출규모가 급격히 감소함.
 -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제25위권 수출상대국, 우리나라는 폴란드의 제15위권 수입상대국
 - 양국간 교역은 2002년부터 소폭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수출 9.3% 증가, 수입 56.1% 증가 이후 2004~06년에는 수출입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며, 양국간 교역은 2009년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 2010년에는 전년에 비해 6.3% 증가함.
 - 주요 수출품목('10):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영상기기, 무선통신기기
 - 주요 수입품목('10): 자동차부품, 운반하역기계, 타일 및 도자기제품
- **해외직접투자현황('11년 9월 말):** **145건, 13.3억 달러(투자실행 누계 기준)**
 - 2007~09년 연도별 직접투자 규모는 2007년 1억 1,854만 달러, 2008년 9,388만 달러

(전년 대비 -20.8%), 2009년 2,983만 달러(-68.2%)로 우리기업의 대 폴란드 투자가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5,454만 달러로 전년 대비 8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이며, 제조업 중에서는 수송기계(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전자통신장비(부품)에 대한 투자가 주종을 차지하고 있음.

<표 3> 한·폴란드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대 폴란드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4,117	4,147	4,38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영상기기
수 입	307	234	274	완동기 및 펌프, 육류, 타일 및 도자기 제품
합 계	4,424	4,381	4,655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폴란드는 2010년에 전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내수 증가, 해외수요의 회복으로 3.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11년에는 소비 및 투자 증가에 따른 제조업 호조 등으로 전년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0년 2.6%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에는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급등, 간접세 인상, 내수 증가 등으로 4.1%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2011년 지방정부 지출 등 재정지출 억제, 부가가치세율 인상, 경기회복에 따른 소득세 증가 등의 재정수입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3.2% 대비 개선된 2.6% 수준으로 추정됨. 경상수지 적자가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유럽 재정위기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2010년 6~7월의 조기대선을 통해 집권 여당(시민강령당) 소속의 코모로프스키 하원의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대통령과 총리(시민강령당 소속)간 갈등이 해소되어 정치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11년 10월 실시된 하원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중도우파 성향의 시민강령당이 승리함.
- 폴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건전한 경제 펀더멘탈, IMF의 신축적공여제도(FCL)를 통한 금융지원,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제구조개혁 지속 시행 등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긍정적임. 폴란드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은 2009년 이후 조정되지 않고 상위 투자적격등급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함.

책임조사역 김찬수 (☎02-3779-5708)
E-mail: avik@koreaexim.go.kr